

제공일자	2009. 3. 4(수)	담당자	산업연구실 기승도 전문연구위원
홍보담당	김 진 역 선임(368-4413)	연락처	02-368-4443 총 2 매

제 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대상사고인 중상해 기준이 전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될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과 이승준 부연구위원은 이번 자료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내용 위헌판결이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제시하였다.

기승도 전문연구위원과 이승준 부연구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사회적 비용의 증감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첫째, 운전자가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경우, 자동차 사고발생을 감소로 전체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상해자 입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운전자(가해자) 및 피해자가 자동차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증가할 경우, 자동차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교통사고처리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발생을 일부 감소하여 손해액이 줄어들 가능성과 중상해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입원 및 입원기간을 늘릴 경우 입원 치료비 증가로 손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기승도 전문연구위원과 이승준 부연구위원은 예상되는 현재의 위헌판결로 효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체 사회적 비용이 유지 또는 감소될 수 있도록 중상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자동차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와 자동차사고 처리 행정비용의 증가가 균형을 유지하거나, 두 효과가 합해져 총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수준에서 중상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회사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내용 위헌판결의 효과가 통계에 나타난 이후에 그 효과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한다.

상쇄효과* 및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에 대한 기억 감소효과 등으로 사고발생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동 판결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상쇄운전(offset behavior):

- 예를 들면, ABS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가정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성능을 과신하여 자동차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상황이 상쇄효과를 내어 자동차사고율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서는 형사합의금을 강화하는 보험상품이 너무 많아질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셋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내용 위헌판결로 예상되는 자동차사고 발생률 감소효과를 상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 및 판매가 필요하다.

넷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내용 위헌판결로 ‘중상해자의 입원증가’와 같이 보험금 지급 패턴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